

초점

# 납본제 폐지로 출판통계 증발 우려

## 규제개혁위원회 폐지방침 발표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관건

‘문화부 납본제 폐지’론이 출판정책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은 문화관광부에 2부씩 납본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혁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의 부담을 덜어줄”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화부는 “출판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판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 출판인은 “강제규정이나 다름없던 납본제 폐지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화지수의 최소 기반인 출판통계를 파악할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분과 실리가 엇나간 ‘문화부 납본제 폐지’ 실타

래 풀기의 귀추가 주목된다.

### 출판계 반응도 두 갈래

현재 출판물 납본제는 문화관광부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국회의 ‘국회도서관법’에 근거한다. 명문화된 법에 의거, 출판사는 출판물(초판 및 개정판)을 발행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 총6부를 납본해야 하며,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일괄 접수한다. 납본된 출판물을 해당 부처에 배송하고, 부처는 특성에 따라 활용한다. 문화부는 출판물 관리·통계자료로 활용한 다음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 2

강제규정이나 다름없던 납본제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출판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년에 한번씩 선정된 시범 공공도서관에 배포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보존·열람자료로, 국회도서관은 국제교류·열람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번 규제 해지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출판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 이외에 납본 보상금이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납본량을 줄여 예산절감 효과도 얻겠다는 생각이다. 문화부의 ‘출판물 관리 및 출판통계’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같은 문화부 소속인 만큼, 통합·관리하

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득원 서기관은 “개혁위는 시행방향을 제시한 수준이며, 시행세칙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부의 몫”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출판물 관리가 더욱 절실하며, 납본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에 더욱 많은 도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국세를 증액해야 할 상황에 납본량을 줄이는 방안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출판진흥과 이동식 계장은 “부처마다 별도의 법령까지 만들어 납본제를 시행하는 것은 출판물 관리 및 보존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역설했다.

예컨대 문화부의 출판물 관리 및 통계 업무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했을 경우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라는 것.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감사에서 ‘납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출판사에 납본독려 공문을 보냈으로써 비로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혁위가 내세우는 “출판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라는 명분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납본 출판물의 실질 보상액은 정가의 50%. 총6부 납본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3부를 사들이는 셈이다. 납본제가 폐지될 경우 1부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지만 비꾸어 말하면, 그 만큼의 도서구입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개혁위와 문화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켜보는 출판계도 두갈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납본제가 검열장치로 악용됐던 깊은 생채기를 안고 있는 출판인은 반기는 분위

## 세계각국의 납본제 운영 현황

**미국** 미국의 의회도서관은 1865년 법률에 의거 모든 등록된 도서, 소책자류는 1부 납본토록 했다. 1870년부터 저작권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2부씩 납본하도록 개정하고, 1978년에는 저작권 취득에 의한 납본조건은 없지만 납본은 종전대로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저작권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특징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정부 간행물의 경우 G.P.O(연방정부출판국)를 통해 1300개 이상의 도서관에 정부간행물을 무상으로 송부하는 기탁 도서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납본제의 역사는 1600년대로 거슬러올라간다. 1662년 출판사전허가 제법을 제정, 왕립도서관·옥스포드·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에 3부를 납본토록 했다.

1709년 저작권법에 의거 에딘버러변호사회·트리니티대학 등을, 현재는 웨일즈국립도서관을 추가했다. 출간 1개월 이내에 납본해야 하며, 보상은 없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파운드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프랑스** 프랑스의 납본제는 엄중하다. 1537년 몽페리에의 칙령에 의거 인쇄물 납본을 명문화했고, 이후 검열을 위해 모든 출판사는 왕립도서관에 출판물 1부를 납본토록 했다. 현행 납본제는 1943년 제정, 발행자는 국립도서관에 4부, 내무부에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인쇄지는 별도로 소재지가 파리인 경우 국립도서관에, 지방인 경우 지정 납본도서관에 2부씩 납본해야 한다. 프랑스는 발행자와 인쇄자 모두에게 납본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

만프랑까지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 지방분권화가 발달된 독일은 1624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3세 때, 모든 인쇄물의 1부를 왕실도서관에 납본토록 했다. 1960년 의무납본제를 시행한 이후 국내 간행물 3부를 받고 있다. 지방종합도서관 또는 주립도서관은 지방 특유의 법률에 의거 지역내 출판업자로부터 모든 도서, 팸플렛,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납본받고 있다.

**일본** 일본의 납본제는 에도시대인 1673년 ‘출판신고지시’에서 시작된다. 1722년 출판령이 반포되어 원고상태에서 검열하고 책이 완성되면 납본토록 했다. 1987년 이후 국회도서관에 2부를 납본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매가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청의 출판물은 발행부수가 5백부 이상인 경우 30부를, 미만인 경우 30부 미만을 납본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회도서관의 국제교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 개혁위와 문화부간의 엇갈린

### 이전 속에 납본제 폐지 방침을

### 지켜보는 출판계도 두 갈래의

###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열장치의

### 악용경험이 있던 출판인은 환영하는

### 입장이고, 서지관리의 체계적

### 운용을 염려하는 출판인은 출판통계 등

### 서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제도장치가

###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기다. 한 출판인은 “납본제는 80년대까지 검열장치로 활용됐다. 이번 일은 억압의 악몽을 떨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그러나 지금 출판물 심의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사후 심의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검열’의 의미가 상쇄된 것으로 보는 출판인도 많다. “서지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가운데 무작정 납본제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납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한 출판인은 “납본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보상에 관한 법안부터 마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출판인의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서지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우선

모든 규제를 무작정 풀기만 한다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출판물을 잘 관리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은 정부의 사명이다. 검열의 의미가 상쇄된 지금의 납본제는 출판물의 총체적인 관리와 서지·문화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납본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납본을 통해서라도 공공도서관의 서지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이재선씨는 “선진국의 경우 법령을 개정하며 납본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지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라고 역설했다.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어 지금도 서지정보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왜 선진국은

납본제를 강화하고 있을까. 그만큼 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서지관리를 위한 위험분산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서지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뿐이다. 조선시대에도 ‘춘추4고’를 두어 위험분산을 꾀했다. 서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납본제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한 출판인은 “출판물의 체계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다음 납본제를 폐지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분과 실리가 한껏 뒤엎긴 ‘문화부 납본제 폐지’ 논란의 방향은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오완진 기자

### 각계 의견

김원득(규제개혁위원회 서기관) — 납본처가 3곳이라 어려운 출판계에 짐이 되고 있다. 많은 출판인들이 납본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검열의 의미가 없어진 마당에 과다 납본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인 출판통계는 의미없다. 전자도서관 기능이 강화되면 더욱 의미가 감소될 것이다.

이동식(문화관광부 출판진흥과 계장) — 문화관광부 납본제 규정을 폐지하면 출판물을 관리할 수 없다. 무분별한 출판물 발간을 방지할 수 없지 않나. 3곳에서 범람까지 제정하여 납본을 받는 것은 서지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폐지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다. 출판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

정종진(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 문화부 납본제를 폐지하는 것은 출판통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출판통계는 최소한의 문화수이기도 하다. 납본제는 출판물 보존을 위한 위험분산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 납본 출판물을 완전 보상해준다면 납본량은 많을수록 좋다. 출판물은 국민의 재산이며,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

### 소식

## 서울시, 공공도서관 구조조정 단행

예산 대폭 삭감 ... '시대역행적 발상' 관련단체 성명서

서울시립도서관 예산 대비('98,'99)

도서관	1998년	1999년	차액	%	명칭변경
정독	1억2천만	1억	2천만	83.3	
종로	9천750만	7천875만	187만	80.76	
남산	1억1천250만	8천275만	3천375만	70.76	
동대문	1억500만	6천900만	3천600만	65.7	
영등포	1억125만	4천900만	5천225만	48.39	평생
용산	1억500만	7천만	3천450만	67.24	
마포	2억4천375만	9천만	1억5천375만	36.9	평생
어린이	9천만	7천704만	1천298만	85.6	
도봉	1억500만	6천400만	4천100만	60.9	
강남	9천375만	4천687만5천	4천687만5천	50	
개포	1억125만	5천25만	5천100만	49.6	평생
강동	9천975만	6천750만	3천225만	67.66	
고덕	1억500만	4천782만4천	5천717만6천	45.5	평생
구로	9천만	5천40만	3천960만	56	
서대문	9천862만5천	5천458만	4천405만5천	55.3	평생
고척	1억500만	5천550만5천	4천948만5천	52.86	
중계	1억125만	4천280만	5천842만5천	42.27	평생
목동	1억725만	6천325만	4천200만	60.83	
동작	9천975만	5천204만	4천771만	52.17	
강서	1억3천500만	7천680만	4천720만	56.89	
송파	1억2천400만	5천만	7천450만	40.16	

\* 서울시립도서관 예산대비표 (단위 원)

\* 자료제공: 전국도서관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구조조정이 개선 차원을 넘어 개악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서울시가 지난 11월 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본지 246호 참조). 주요 내용은 직위 중심의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1개 도서관 가운데 마포도서관·영등포도서관 등 6곳은 ‘평생학습관’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한다는 것. 예산 역시 대폭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 대부분은 20~50%대 예산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도서관은 50~60%대 예산삭감을 준비하고 있다. 98년도 일년 예산이 2억4천375만원인 마포도서관의 경우, 99년도에는 9천만원으로 무려 63%를 삭감, 가장 큰 폭의 삭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국도서관협회·서지학회·한국문헌정보학회 등 9개 단체는 ‘공공도서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공공도서관 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제2건국을 위한 실천과제로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이 되는 창조적 지식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도서관의 수준이 국력을 좌우한다”고 한 말까지 인용하며, 서울시를 맹비난했다.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지역단위 핵심 종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2011년까지 750개관을 목표로 지속적인 건립을 추진하고 자료구입비를 증액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어, 자치단체의 정책과 배치된다. 한편, 공공도서관 6곳 중에 3곳을 ‘평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던 인천시는 조례개정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완진>